

안녕하세요. 박형준 변리사입니다.

먼저, 원하는 점수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문이 ‘애매’하여 이의신청을 ‘시도’해 볼만한 문제들이 존재하지만(4번 문제의 지문 ③, 6번 문제의 지문 ③, 8번 문제의 지문 ③, 13번 문제의 지문 ①, 15번 문제의 지문 ④), ‘실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특정 지문이 부정확하거나 애매하거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지만으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문까지 고려하여 그로 인해 해당 문제에서 정답을 고르기 어려운 경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675 판결 참조)

(i) 위와 같이 애매한 지문들이 많이 존재하는 점, (ii) 사례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된 점, (iii)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많이 출제된 점 (v) 연혁 관련 내용이 섞여 있는 지문이 출제된 점에 비추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거법을 통해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난이도는 “중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출원인으로부터 출원고안의 실용신안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출원대리인은 출원인 본인을 위하여 거절결정등본 등 출원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거절결정등본 송달의 효력은 출원인과 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 ③ 특허의 공동출원인 2인 중 1인만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함에도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④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서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여 진행한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 ⑤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반드시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당해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당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 ④

① (옳음) 특허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② (옳음) 특허법원 2019. 6. 14. 선고 2019허22 판결

③ (옳음)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④ (그림) 특허청장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서류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는 특허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출된 서류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⑤ (옳음)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2. 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ㄴ. 특허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2025. 1. 28. (화요일) 28일부터 30일은 법정공휴일인 경우 2025. 1. 31. (금요일) 제출된 의견서는 적법한 서류로 볼 수 없어 반려되어야 한다.
- ㄷ.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이 2025. 1. 31.(금요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그 기간은 2025. 2. 3. (월요일)부터 기산한다.
- ㄹ. 특허법상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 ③

- ㄱ. (그림)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거절결정불복]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특허법 제15조)
- ㄴ. (그림) 공휴일 → 다음 날 만료 (특허법 제14조 제4호 참조)
- ㄷ. (그림)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 초일 불산입의 예외 (특허법 제14조 제1호 단서)
- ㄹ. (옳음) 특허법 제219조 제3항

**3. 특허법상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 ②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제42조(특허출원)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특허법 시행령 제2조(미생물의 기탁)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 ③ 발명의 설명에서의 기재 오류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다면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1호가 규정하는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의 용도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청구범위에는 의약용도를 치료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인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약리기전만으로 구체적인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청구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 ⑤

① (옳음)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② (옳음) 특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③ (옳음)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후2586 판결

④ (옳음)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

⑤ (그림)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정해진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

4. 甲은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6. 1.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이어서 A를 개량한 A+B를 발명한 후 2024. 6. 1.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면서 발명 A, A+B, C에 대하여 특허출원 Y를 하였고, 특허출원 Y는 2024. 12. 1. 출원공개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 ① 甲은 특허출원 Y에 대하여 2027. 6. 1까지 심사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특허출원 Y에 대하여, 2023. 8. 1. 출원한 발명 C에 특허출원 W를 기초로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2024. 10. 1까지 그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였어야 한다.
- ③ 甲이 특허법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에 따라 취하 간주된 특허출원 X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2025. 2. 1. 신청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乙이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4. 1. 발명 A를 공지하였고, 2024. 4. 1.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수반하여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V를 하였다면, 甲의 특허출원 Y 중 발명 A는 등록받을 수 없다.
- ⑤ 乙이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4. 1. 발명 A를 공지하였고, 2024. 4. 1.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수반하여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V를 하였다면, 乙의 특허출원 V는 등록받을 수 없다.

정답 : ③

① (옳음) 우선일로부터 3년 X, 출원일로부터 3년 O (특허법 제59조 제2항)

② (옳음) 선출원일로부터 1년 4월 (특허법 제55조 제7항)

③ (그림) 출원공개된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의 기초출원에 관한 서류는 취하간주되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하여도 제216조 제2항 제1호를 이유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의 기초출원에 관한 서류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공중위생을 해칠 염려가 있다면 제216조 제2항 제3호를 이유로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여지’가 있다. 한편, 특허출원 Y가 출원공개된 점에 비추어 발명 A도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공중위생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되나,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단서는 “출원공개 시 게재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발명 A도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공중위생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 Y에서 발명 A가 제외된 채로 출원공개될 수도 있는데, 이는 설문상 불분명하다. 한편, 특허법 제216조 제2항 제1호 괄호 규정의 취지는 제3자 입장에서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의 판단시점 소급범위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공중위생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특허법 제216조 제2항 제1호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3자 입장에서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의 판단시점 소급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는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공중위생을 해칠 염려가 있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허가됨에 따라 특허법 제216조 제2항 제3호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애매하다. 다만, 나머지 지문이 모두 맞는 지문으로 가장 상대적인 정답은 해당 지문이라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④ (옳음) 공지에외주장의 효력은 당해 출원에만 인정되므로 타당함 (특허법 제30조 제1항 참조)

⑤ (옳음) 선출원의 거절결정 확정에 따른 선출원지위 소멸 여부와 무관하게(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2호),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은 확정적 거절이유임(특허법 제29조 제3항)

5. 甲은 벤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2023. 6. 1.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 A, B, C 및 청구범위 A’를 기재하여 특허출원하였다. 이후 甲은 2024. 2. 1. 발명의 설명에서 B를 삭제하고 청구범위를 A에서 C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였다. 이후 甲의 특허출원은 2024. 12. 1. 출원공개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 ① 甲이 2023. 7. 1.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양도하여 乙로 출원인을 변경하였다더라도 이 출원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丙이 2023. 6. 1.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출원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 ③ 丁이 2025. 1. 1.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출원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 ④ 戊가 2023. 6. 1. 발명 A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출원은 2024. 12. 1. 시점에서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누구든지 2026. 6. 1. 甲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 ②

- ① (옳음) 특허출원 당시 출원인 동일 (특허법 제29조 제3항 단서)
- ② (그름) 동일자 출원인 경우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 X (특허법 제29조 제3항 참조)
- ③ (옳음) 출원공개 이후 출원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④ (옳음)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C와 발명 A는 상이하므로(삭제 보정), 특허법 제36조 위반이 아님
- ⑤ (옳음) 특허법 제59조 제2항, 특허법 제61조 제2호,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5호

6.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이 설정 등록된 이후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 ②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조약 당사국에 제1국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우선권주장 출원을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③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독립적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④ 특허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된 경우라면, 동일한 발명을 출원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더라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⑤ 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乙이 발명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그 발명을 게재한 경우, 甲이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乙의 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여야 한다.

정답 : ③

① (옳음) 특허법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② (옳음) 2023년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3235-3236페이지

③ (그림애매) 제3자의 독립적 출원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을 여지는 있지만, 출원 전 1년 이내의 자기 공지에 대해 특허법 제30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문의 후단에서 특허법 제30조의 대상이 직접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제3자의 독립적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서 옳은 지문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문맥상 이러한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나머지 지문이 모두 맞는 지문으로 가장 상대적인 정답은 해당 지문이라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④ (옳음)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

⑤ (옳음) 의사에 반한 공지 → 특허법 제2항 및 제3항 부적용



**7.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대비할 수 있다.
- ②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③ 특허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와 무관하게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 ④ 특허출원 전에 특정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이 존재하는 경우, 위 제조방법에 따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다.
- ⑤ 특허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를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정답 : ①

- ① (그름)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을 1대 1로 비교하여 선행발명에 그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나와 있어야 하고 그 특허발명의 구성이 2개 이상의 선행발명에 일부씩이 나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특허법원 2005. 5. 20. 선고 2004허5160 판결)
- ② (옳음)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 ③ (옳음)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 ④ (옳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304 판결
- ⑤ (옳음)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8.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 ②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파악한 다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③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산업분야가 상이한 경우라도 선행기술의 구성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④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 ⑤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을 기초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

정답 : ⑤

① (옳음)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529 판결

② (옳음)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③ (옳음 애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판례가 제시한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이 제외된 지문이라 애매하다. 다만, ⑤ 지문이 확실히 틀린 지문으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④ (옳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

⑤ (그름) 어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9. 특허법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이상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②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 특허출원에 대한 적법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제공된 정보에 기속되고, 이를 근거로 특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할 때 직권보정을 하였다면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답 : ③

- ① (옳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63099 판결
- ② (옳음) 특허법 제63조의2 (무효심판과 차이)
- ③ (그림) 심사는 심사관이 한다.
- ④ (옳음) 특허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제2항
- ⑤ (옳음) 특허법 제66조의2 제3항

10. 특허법상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 · 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수차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ㄴ.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허가 등이 소요된 기간 중,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ㄷ.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데 필요한 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특허권자 외에도 전용실시권자 및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된다.
- ㄹ.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해당 특허권자여야 하고, 만약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 ㅁ.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청구범위만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ㅁ ④ ㄴ, ㄷ ⑤ ㄷ, ㅁ

정답 : ③

㉠ (그름) 한차례 (특허법 제89조 제1항)

㉡ (옳음) 특허법 제89조 제2항

㉢ (옳음) 특허법 제91조 제2호 참조

㉣ (옳음) 특허법 제90조 제3항, 특허법 제91조 제4호 및 제5호

㉤ (그름)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 특허법 제95조는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그 허가 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은 이와 같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을 뿐, 허가 등의 대상 ‘품목’의 실시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

11.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허권 남용 금지에 관한 특허법상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법원은 특허권 남용의 법리를 수용하고 있으나, 특허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허권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특허권의 행사가 제한될 뿐이다.
- ②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협의를 거부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모든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⑤ 특허법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특허권을 신뢰하여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실시 준비 중인 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용신안법은 고안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정답 : ①

- ① (옳음) 특허권 남용 금지 규정 삭제 (1987년 7월 1일 시행 개정 특허법) + 당연무효의 항변 불가능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 권리남용의 항변 가능(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 ② (그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 ③ (그름) 사람의 질병을 요건으로 한다. (특허법 제96조 제2항 괄호)
- ④ (그름) 실용신안법은 의약에 관한 규정이 없다.
- ⑤ (그름) 중용권 (특허법 제104조, 실용신안법 제26조)

12.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본다.
- ②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안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③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乙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 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 •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 ⑤ 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乙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 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甲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추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복멸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범위에 관하여는 乙이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 ①

- ① (그림) 간주 X, 할 수 있다 (특허법 제126조의2 제4항)
- ② (옳음) 특허법 제128조 제8항
- ③ (옳음) 특허법 제126조의2 제2항
- ④ (옳음)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 ⑤ (옳음)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38639

**13. 특허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허권자 甲과 그로부터 특허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乙 사이에 ‘乙이 그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으로 인하여 乙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한다면 특허권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④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⑤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타당하다.

정답 : ④

① (그름 애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위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쌍방이 합의에 이르러 피심판청구인이 위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에게 합계 금 1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아가 피심판청구인과의 사이에 "피심판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등록 제63061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약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략)... 문언상으로는 위 합의의 취지를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위 합의로써 곧바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이 사건 [확인대상] 고안이 속함을 인정하였거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심판청구권까지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를 달리 해석할 자료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면 위 판례의 태도에 따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후에 ‘권리를 부정’하기 위한 무효심판 청구를 할 이익은 상실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④ 지문이 확실히 맞는 지문으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② (그름)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후161 판결)

③ (그름)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따라 잘못된 기재물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6조 제2항)

④ (옳음)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⑤ (그름)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14. 특허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②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 ③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경우에는,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原)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
- ⑤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후에 생겼을 경우 특허법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 ⑤

① (옳음) 특허법 제180조 제2항

② (옳음) 특허법 제179조

③ (옳음) 특허법 제178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④ (옳음) 특허법 제183조

⑤ (그림)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특허법 제180조 제4항)

15. 특허권자 甲이 경쟁사 乙 및 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자, 乙 및 丙은 공동으로 甲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甲의 특허 중 청구항 제1항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乙이 주장한 선행기술 A에 의하여 甲의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허법원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甲이 특허법원에 丙을 상대로만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乙에 대한 제소기간 도과로 심결 중 乙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만이 그대로 분리 • 확정되지 않는다.
-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의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④ 甲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기술심리관은 자신이 甲의 친족이었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 ⑤ 甲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 丙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선행기술 B에 의하여 甲의 특허 중 청구항 제1항의 진보성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나, 청구항 제2항의 진보성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다.

정답 : ④

① (옳음) 특허법 제188조 제1항

② (옳음)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

③ (옳음) 특허법 제164조 제2항 및 제3항

④ (그림 애매) 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특허법 제188조의2)

그 소속 법원(특허법원[기관])을 특허법원장[기간의 구성원 중 1인]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다만, 나머지 지문이 모두 맞는 지문으로 가장 상대적인 정답은 해당 지문이라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⑤ (옳음) 처분권주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준용)

16. 甲은 乙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이 청구는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었고, 甲은 2024. 4. 1. (월요일)에 심결등본을 송달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② 甲은 기각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각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③ 甲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 계산에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특허법원에 2024. 5. 1.(수요일)까지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④ 甲이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심판장은 제소기간에 대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⑤ 甲이 2024. 5. 1.(수요일)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2024. 5. 2.(목요일)에 20일의 부가기간이 지정된 경우, 甲이 2024. 5. 21.(화요일)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정답 : ⑤

① (옳음) 특허법 제186조 제1항

② (옳음) 특허법 제186조 제3항

③ (옳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1573 판결

④ (옳음) 특허법 제186조 제4항

⑤ (그림)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 제5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이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소기간의 연장을 위한 부가기간의 지정은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고, 단순히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내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후4649 판결)

17. 특허협력조약 (PCT) 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 될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③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인 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⑤ 특허청장은 국제 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 ②

① (옳음) 특허법 제201조 제3항

② (그림) 국제출원서(또는 국제출원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필요 없다. 또한 도면의 설명 부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취하간주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201조 제1항 및 제4항 참조) 한편,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정명령 후 절차무효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옳음) 특허법 제193조 제1항

④ (옳음) 특허법 제203조 제4항

⑤ (옳음) 특허법 제194조 제3항 및 제4항

18.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거짓으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진술·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ㄹ. 특허법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 ③

㉠ (옳음) 특허법 제227조

㉡ (옳음) 실용신안법 제46조

㉢ (옳음) 특허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 (그름) 비밀누설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230조)

19. 특허법상 우선권 주장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 ②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③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 ④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항제1호(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제3호(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를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 ⑤ 특허법 제 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 : ④

① (옳음) 실용신안법 제11조 준용

② (옳음) 특허법 제53조 제6항

③ (옳음) 특허법 제56조 제2항

④ (그림)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소급 X (특허법 제55조 제3항)

⑤ (옳음) 특허법 제56조 제3항

20. 甲은 2023. 6. 1. 미국에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이후 2023. 12. 1. 국내에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면서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에만 A, B를 기재하고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특허출원 Y를 하였다. 한편 乙은 2023. 9. 1.부터 발명 A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 ㄱ. 甲이 乙에게 특허법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甲의 특허출원 Y는 반드시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되어야 한다.
- ㄴ. 甲이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甲의 특허출원 Y가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되는 경우는 없다.
- ㄷ. 乙이 2024. 3. 30. 甲의 특허출원 Y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특허청장으로부터 이 심사청구의 취지가 甲에게 2024. 4. 1. 통지된 경우, 甲은 2024. 7. 1 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 ㄹ. 乙이 甲의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乙은 甲에 대하여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① ㄷ ②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정답 : ②

㉠ (옳음) 특허법 제56조 제1항, 제2항

㉡ (옳음) 특허법 제64조 제2항 제1호

㉢ (옳음) 특허법 제42조의2 제2항

㉣ (그림) 위에 언급된 기간의 만료전에 타 동맹국에 낸 후출원은 그 기간중에 행하여진 행위, 특허, 타출원, 당해 발명의 공표 또는 실시, 당해 의장으로 된 물품의 판매 또는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제3자의 권리 또는 여하한 개인 소유의 권리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각 동맹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유보된다. (파리조약 4B)